

#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6. .  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정이유

- 가. 하남시는 65세이상 노인 42,529명(13.15%)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
- 나. 노인 세대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(안 제7조)
- 다.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16조, 제17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## **7. 입법예고**

가. 예고기간 : 2022. 4. 28. ~ 2022. 5. 18.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노인복지과**

#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령친화”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고령친화도시”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3. “고령사회 가이드라인”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.
4. “고령친화도”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.

**제3조(기본이념)**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, 노인은 사회경제적·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.

**제4조(책무)**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하남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다.

**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**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##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

**제6조(계획수립 등)** ① 시장은 「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
3. 주요 정책과제
4. 연도별 추진계획
5. 추진사업 목록
6.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)**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본청,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**제8조(생활환경 편의증진)**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

2.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
3.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
4.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
5.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9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**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2.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3.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4.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5.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사회활동 참여의 장려)** 시장은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
2. 노인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3.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
4. 그 밖에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

**제11조(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)**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
2.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
3. 노인에 대한 존경,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

4.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
- 제12조(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고용촉진 및 직업안정)**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
  2.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
  3.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
  4.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
- 제14조(교육 및 홍보)**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추진실적의 평가)**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

- 제16조(설치)**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제17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1.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
  2.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,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
  3.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
 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8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노인업무 담당 국·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하남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,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,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

**제19조(위촉직 위원의 임기)**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20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
2.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

**제21조(위원의 제척 등)**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위원장의 임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

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3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.

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5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제4장 보칙

**제2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 종 현
	팀장 직위 · 성명	노인복지팀장 김 은 옥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은 옥 (790-5373)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1

「노인복지법」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0. 12.21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2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[시행 2022. 4. 1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 제2절 고령사회정책
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

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·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(노후설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, 건강, 여가,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5. 23.]

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·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·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18조(경제와 산업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·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·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